

로스쿨 선정 靑 개입 했나

과장했다기엔 윤승용 주장 너무 구체적

“교육위원 후보수석 몫으로 박모씨 밀었다” 선정 결과 미리 알고 선거홍보물 제작 가능성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의 청와대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라며 꺾적 뒤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에는 윤승용 전 후보수석이 있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제기되는 갖가지 정황은 윤 전 수석이 로스쿨 선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와대 개입 의혹=윤 전 수석의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수석은 지난달 3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청와대의 로스쿨 관련 임시 TF팀에 들어가 법학교육위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수석 몫으로 배정된 추천인사로 익산 출신 박모씨를 밀어 성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광대가 지방대 중 영남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법시험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5년 사시 평균 합격자수와 법대 졸업생 대비 합격자수를 25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로스쿨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도 강조했다.

조했다. ▷로스쿨 파문 확산=파문이 일자 윤 전 수석은 총선을 의식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번에는 선거홍보물이 그의 발을 잡고 있다. 윤 전 수석의 발언 내용을 담은 선거홍보물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것. 과장된 발언을 선거 홍보물에 담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 또한, 자신이 스스로 과장된 발언이라고 한 점에서 윤 전 수석은 선거홍보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선거 홍보물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발표(1월 31일)되기 훨씬 이전에 인쇄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윤 전 수석이 이미 로스쿨 선정 결과를 알고 선거홍보물을 제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윤 전 수석의 로스쿨 선정 과정 개입 의혹은 단순한 개인 차원을 떠나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입힐 전망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개입 여부=청와대에서는 “로스쿨 TF가 구성된 적도 없으며 후보수석 몫 추천 인사도 없었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윤 전 수석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수석도 “청와대 내에 워낙 많은 회의체가 있어 혼동한 것 같다”며 “총선을 의식한 과장된 발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안은 간단치 않다. 청와대 TF 구성, 로스쿨 선정 배점, 로스쿨 지정 대학 발표 시점 등 윤 전 수석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특히,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가 거짓으로 드러날 것을 단순하게 총선용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로스쿨이 특정 대학에 유리하도록 평가위원이 사전에 조정되고 심사기준도 짜맞춰졌다는 얘기가 정설로 돌고 있다. 즉, 로스쿨 선정에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모위원이 선정 대학에 사전 정보 제공했다”

로스쿨 선정 논란 일파만파

박 모위원, 의혹 전면 부인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선정 심의 결과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로스쿨 선정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탈락 대학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 특정 대학 밀어주기 의혹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윤승용 전 청와대 후보수석 비서관이 원광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선정되도록 법학교육위원으로 추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박 모위원이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대학에는 며칠 전에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박 위원은 이어 윤 후보수석이 지난달 27일 인쇄된 퇴한 총선용 홍보책자에 원광대 로스쿨 인가 사실을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윤 후보수석도 원광대를 통해 인가 선정 사실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법학교육위원들이 특정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위해 역할을 하거나 관계가 있는 대학 측에 로스쿨 선정 관련 동향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의 잠정안 발표 이전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인가 사실과 정황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가 특정 대학에 당락 여부를 통보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예비인가 확정 발표 이전 공식적으로 대학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수석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 위원은 “윤 전 수석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 자신과 윤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과과정 체계화·전문화 국내 톱5 로스쿨 되겠다”

전남대 운영 어떻게

돌아가고, 향후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장학금 대물리기 사업 등을 통해 전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전남대학교는 5일 “국내 톱5 로스쿨로 자리 잡기 위해 교과과정을 체계화·전문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대(1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정원 120명을 배정받은 전남대는 공익·인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하되 기업법, 민사법, 형사법, 공법, 국제관계법 등 6개의 전공영역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남대는 판·검사 출신 7명이 포함된 35명의 전임교수와 21명의 겸임교수를 갖춘 상태다.

등록금은 연간 1천만원 내외로 예상되며 대학 측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정원의 10%를 선발하게 된다. 5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전체 학생의 25%에게 장학금이

전남대는 예비인가를 계기로 인프라 확충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10월까지 모의법정 등 최신 교육시설을 갖춘 5천300㎡ 규모의 전용 건물이 신축되고 6천621㎡ 규모의 기존 건물 리모델링도 끝나게 된다.

로스쿨 전용 기숙사는 지난해 8월 완공된 202실 규모의 기숙사 8호관을 활용한다.

전남대 박휴상 법대 학장은 “공익과 공동의 가치를 위해 봉사하는 법조인, 전문가 정신을 갖춘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며 “광주·전남 지역 로스쿨 정원이 120명에 불과한 점을 아쉽지만, 우리 대학 로스쿨이 국내 톱5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법학교육위에 로스쿨 신청 대학 교수 배제했어야”

조선대 법률자문지원단 이영무 교수



“조선대는 완전 틀러있었던 겁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해야죠.” 5일 오후, 조선대 법대 교수연구실에서 만난 조선대 로스쿨 법률자문지원단(이하 지원단) 이영무(45·사진) 교수는 격양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지원단은 조선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취하게 되는 법적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이 교수는 “당장 설 연휴가 끝나 다음주 월요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법학교육위원회에 심의에 참가해선 안 될 사람들이 참가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위원 중 로스쿨 신청 대학의 교수 4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여기에 청와대 개입 의

혹의 주인공 윤승용 전 청와대 후보수석이 ‘밀었다’는 언론계 인사 박모씨도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측은 윤 전 수석을 직무상 비밀누설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 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광범위한 부정과 편법이 자행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심사기준이 몇몇 대학에 유리하게 바뀌었던 것도 큰 문제죠.” 이 교수는 “당초 외국어 강좌는 최소 3개였지만 대학 교수 출신의 한 법학교육위원의 주장에 따라 20

개 늘려졌다”며 “사시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학교가 1차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편입시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선대가 제출한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같은 권역에서 경쟁했던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예비인가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도 하게 된다. 국단적으로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Daily 3.1 National Marathon. It features a runner, a large crowd, and a map of the race route. Text includes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and 'Kwangju Daily 3.1 Marathon'.